

“채용원서 수백장 목사 사무실서 발견...경찰은 수색조차 안해”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자들 광주지검 앞 집회 왜

“피해자 수백명 진술 제대로 안받고 사기증거 압수 안해
연루된 목사 더 많은데 경찰은 사건 초기 종결에만 관심”
한전 취업 사기도 관여 주장 속 엄정한 수사·처벌 요구

대기업 기아차에 취업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12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기아차 취업사기,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실 수사 의혹을 제대로 짚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실함을 지적하며 수사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도 내놓았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기아차 취업사기 대책위원회는 A목사의 경우 피해자 222명의 취업 청탁금 가운데 21억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경찰의 수사 방향이 A목사와 30대 남성에게만 치우치면서 더 많은 지역 목사들의 범행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사건에 연루된 목사들이 더 많은데 경찰은 사건을 빨리 마무리짓는데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및 관련 증거 확보가 기본인데도, 수백명에

이르는 피해자 진술을 아예 받지 않았고 용의자인 A목사의 사기 행각을 입증할 증거도 압수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사기 피해자 10여명에게만 진술을 받는 데 그쳤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내역만 제출 받았을 뿐 정확한 피해 경위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특히 기아차-한전 입사지원서 수백장이 주범인 목사 사무실에서 발견됐지만 경찰은 피해자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서기는 커녕,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사무실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A목사 사무실 침대 밑에서 피해자들이 제출한 기아차 채용원서 200여 장이 발견됐다”면서 “경찰에 사무실 존재를 알렸지만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결국 경찰 수사만 지켜볼 수 없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맞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집합을 찾았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경찰에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책위는 “경찰이 넘긴 30대 남성과 50대 A목사 이외에도 일부 목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2년 동안 650명이 넘는 피해자와 150여억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 2명 이외의 일부 목사가 동조·복인·가담했기에 가능

했다”며 해당 목사들에 대한 진정서도 검찰에 제출했다.

또 A 목사의 경우 기아차 뿐 아니라 전력공기업 한전에 취직시켜 준다는 취업사기 행각도 벌였으며 추가 고발장도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아차 취업사기 대책위원

회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 현황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는 경찰 수사를 어떻게 믿고 기다릴 수 있겠냐”면서 “피해입증을 피해자들이 해야 한다면 차라리 우리 피해자들에게 수사권을 달라”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기아차 취업사기 대책위가 A목사 사무실에서 발견한 수백장의 채용원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서류도 증거로 확보하지 않았다. (기아차 취업사기 대책위원회 제공)

대기업·공공기관 주요 대상...정치적 특수성도 범행 악용

판결문으로 본 취업사기

최근의 법원 판결은 취업난을 악용, 대기업 등에 채용시켜주겠다고 금품을 가로챈 다양한 취업 사기의 유형을 엿볼 수 있다. 근무환경과 처우 뿐 아니라 높은 임금, 정년외 보장된 대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범행 대상에 빠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 특수성도 범행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

이다.

지난달 재판(광주지법 형사 9단독)에 넘겨져 징역1-2년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여·66)씨 등은 “교육청 계약직 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 뒤 정직원으로 전환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가로챘다가 하면, “LH 공사 광주지사 고위직을 알고 있는데, 기술경력직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는 거짓 말을 해 채용 알선·회식비 명목으로 4100

만원을 뜯어냈다.

B씨는 대전에 위치한 모 타이어 하청업체에 1년 가량 근무한 경력밖에 없는데도, 정직원으로 취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사하면서 ‘모 타이어는 2000만원, 모 공조는 3000만원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 돈을 주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제안해 채용 사기를 벌였다.

지방 공기업도 채용 사기에 빠지지 않았

다. C씨는 “정권이 바뀌면 공기업에서는 직원 1-2명을 채용하는 게 관례”라며 “전남개발공사 총무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챘다가 재판(≪ 형사 4단독)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D씨는 지난해 1-5월 E·F씨에게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 자녀를 무기계약·정규직 등으로 채용해주겠다고 2000만~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광주지법 형사 1부)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당원 불법 모집 혐의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위법 증거수집 논란’ 재판 초반 쟁점으로

검·변 절차 준수 여부 공방

검찰의 압수수색 방식을 둘러싼 ‘위법한 증거수집’ 논란이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재판의 초반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검찰과 정 전 부시장측 변호인들은 12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도 지난달에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

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 전 부시장 등 6명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심리보다, ‘위법수집 증거’ 논란이 더 부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본건’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와 관련, 도시공사 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별건(別件)

인 ‘민주당 지역당원 입당원서’ 149장이 든 봉투 2개를 발견해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한 이후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특수부 검사실에서 집행한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는 모양새다. 정 전 부시장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도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진술조서, 피고인신문조서 등을 제시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시공사 경영이사 A씨를 대상으로 ‘임의제출 거부권’을 고지했고 추후 특수부 검사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공공수사부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했다는 취지

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측은 A씨 신문을 통해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당원명부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의 구체적 연관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진술, 입당원서사 특수부에 임의 제출했지만 공공수사부가 특수부가 아닌, A씨로부터 압수한 것으로 압수수색영장을 기재한 사실 등을 확인하며 위법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해당 증거 채택 여부를 보류하고 압수수색 과정과 증거의 위법성을 더 살피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16일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소극행정 불만 신고 경찰청이 최다

자신의 업무를 하지않거나 미뤄 주민들의 생활과 활동에 불편을 주는 공무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5만 5033건의 소극행정 불만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경찰청을 상대로 한 불만 신고가 5663건(10.2%)으로 가장 많았다.

소극행정신고센터는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공무원을 신고하는 곳으로 지난해 3월 개설됐다.

경찰청은 정부부처 가운데 소극행정 신고건수가 56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노동부(2296건), 국토교통부(1883건), 국민권익위원회(1011건) 순이었다. 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각각 1102건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소극행정 불만이 접수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